
2015년도 주요업무계획

2015. 1. 22.

목 차

I. 정책성과 및 평가	1
II. 2015년도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	4
III.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	6
1. 문화유산 보존 · 전승 체계 고도화	7
2. 문화재 분야 규제 합리화와 참여 활성화	14
3. 문화유산 향유와 미래가치 창출	19
4. 문화유산 교류와 환수 · 활용 내실화	23
IV. 소통하고 청렴한 문화재 행정 구현	27
V. 정책 실현 후, 달라지는 모습	29
<참 고> 문화재 청 일 반 현 황	31

1 주요 정책성과

□ 수리체계 혁신을 통한 문화재 수리 품질 정상화 기틀 마련

- 수리기술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(시행령 규칙 개정, '14.12월)
 - * 의무감리 확대(당해문화재 5→3억원 이상), 비상주감리원 배치기준 강화(10→5개), 수리업 등록 의무고용 최소화(10→5명), 부실 문화재수리업체 처분 강화(2차 위반시 취소)
- 자격증 불법대여 재발방지 및 자격제도 개편 추진
 - * 행정처분 기준 강화(3차→1차 위반시 취소), 일제조사 실시('13.11월~'14.2월, 112명 적발 행정조치), 자격시험 개편 연구 실시('14.8월~12월)
-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(시범개방 10건) 및 민간점검단 현장점검(3회) 강화

□ 문화재 전수조사 등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

- 「문화재 특별 종합점검」 실시('13.12월~'14.5월)
 - 구조안정성 소방방재 생물피해 등 관리실태 전수 점검(총 7,393건)
 - 보호조치 대상 선정(D~F등급 1,683건) 및 정비 추진
 - * 보수조치(271건), 15년 예산반영(212건, 693억원), 상시모니터링(894건)
 - 제도 개선과제 도출(중점관리대상 선정,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등 9개 과제)
- 문화재 돌봄사업 강화(시 도지정문화재로 대상 확대)
 - * (13년) 59억원, 2,063개소 → (14년) 84억원, 5,657개소(전체문화재의 50%수준)

□ 발굴 및 보수·복원으로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 확보

- 나주 정촌고분 발굴(돌방무덤 및 백제 금동신발, '14.10월), 조선시대 추정 고선박 및 백자유물(111점) 수중 발굴('14.11월)
- 조선왕궁 및 왕릉 복원(경복궁 소주방, 덕수궁 석조전, 태릉 의릉 원형회복 등)
- 황새마을 조성 등 2,300여 건의 문화재 보수 정비('13~'14년, 5,405억원)

□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·제도 개선으로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 구현

- 국민 공감 발굴제도 개선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
 - 민간에서 발주하는 지표조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(법률 개정, '14.1월)
- 무형문화재 지정 인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('14.12월)
 - * 보유자 복수인정, 조사현장 공개, 조사위원 확대(3→5인이상), 지정범위 확대 등
- 고도 주민지원(고도이미지 찾기 사업) 추진기반 마련('15년, 80억원)

□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

- 궁궐과 도성 역사문화체험 활성화(수문장교대의식 등 44개 프로그램)
- 생생문화재(70개), 서원 향교(38개소) 등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확충
- 궁 능 무료개방 및 야간 특별관람 확대('13년 17일 → '14년 42일)
- 취약계층 대상 '문화유산 힐링 체험' 운영(다문화가족 왕실문화 체험 등)
- '나만의 문화유산 여행가이드'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('14.12월)
 - * 문화유산 답사설계 - 동행해설 - 안전지킴이 신고 - 체험후기

□ 세계유산 등재 및 국외문화재 환수로 국민 자긍심 고취

- '남한산성'(세계유산), '김장문화' '농악'(인류무형유산), '난중일기' '새마을운동기록물'(세계기록유산) 등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(5건)
 - * (12년) 34건 → ('14년) 39건 등재 <세계유산 11, 인류무형유산 17, 세계기록유산 11>
-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 진출 및 활동('14~18년 임기)
- 문화재 환수 최초로 국제 수사공조를 통한 '호조태환권 인쇄 원판'('13.9월) 및 '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' 환수('14.4월)

□ 체계적 재난안전관리 및 문화재 유통질서 개선

-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설비(소화 경보 방범설비) 475건 구축완료
-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사범 단속 강화(「영산회상도」 등 958점 회수, '13~'14년)

□ 중요문화재 전략적 관리 기법 향상 필요

- 문화재 이력 통합관리 미비 및 각종 조사·점검의 정책 환류 미흡
- 문화재 현장의 국민 참여 모니터링 여건 조성 필요
- ⇒ 중요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, 문화재정보 공개 등 **현장밀착형 정책 강화**

□ 문화재 법령·제도의 선진적 개선

- 수리기술 부당불법행위 방지 제도 미흡, 무형문화재 다양성 확보 필요
- 현상유지 중심의 규제로 국민 불편,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 요구 증대
- ⇒ 수리기술 제도의 근본적 혁신, 무형유산 보전·진흥법률 조속 제정, **문화재 규제의 합리적 개선·지원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익 제고**

□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필요

- 궁궐별 특성을 살린 고품격 콘텐츠 부족 및 인기 프로그램 수용력 포화 상태(달빛기행, 고궁 야간개방 등), 지역문화유산 활용자원 개발 필요
- 세계유산 가치 증대 및 홍보 활성화 저조
- ⇒ 새로운 차원의 활용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**창작 콘텐츠 적극 개발**,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·홍보 강화

□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및 방재 체계화 미흡

-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위험성 증가
- 미래 위험수요 대비 방재정책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 미흡
- ⇒ 문화재 도난예방 강화 및 불법반출 방지시스템 개선, 문화재 **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**

II

2015년도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

□ 문화유산 국가브랜드 가치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요구

- 고궁을 찾는 국내 외 관람객 증가, 자유학기제 등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, 동아시아 역사문제 대두 등에 대응할 콘텐츠 확충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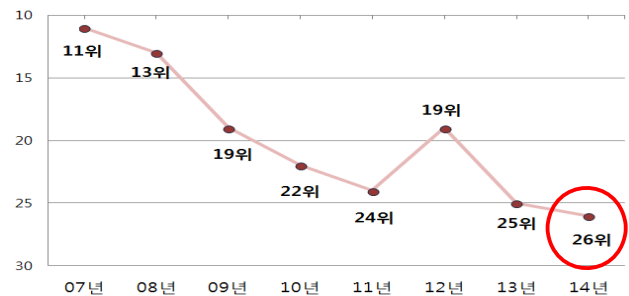
* 궁 능 관람객 현황 : (12년) 1,088만명 → (14년) 1,297만명

- 문화재 가치 개발 증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 동력 부여 필요

* 14년 다보스포럼 국가경쟁력 순위 26위(144개국 중), GfK(세계적 시장조사기업) 국가경쟁력 27위(50개국 중)로 GDP 규모(세계 14위)에 비해 경쟁력 저조



【궁능 관람객 증가 현황】



【한국 국가경쟁력 연도별 순위】

□ ‘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’ 간 균형 있는 정책 개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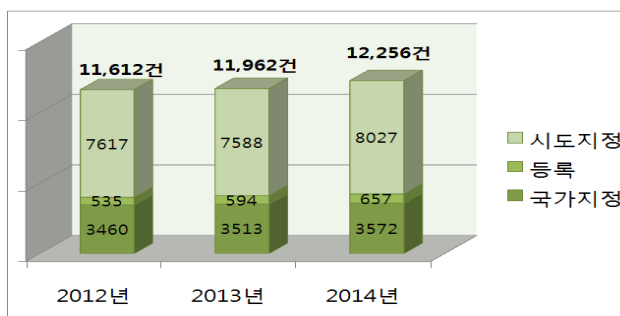
-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및 훼손 위험 증가에 따른 보존 필요성 증대

* 지정문화재 수 추이 : (12년) 11,612건, (13년) 11,962건, (14년) 12,256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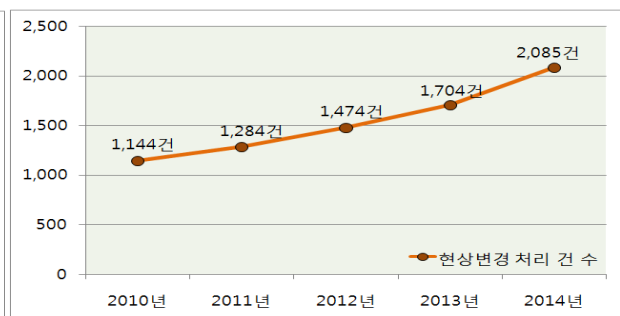
-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등 문화재 규제완화 요구 증대

* 현상변경 처리 건수 : (12년) 1,474건, (13년) 1,704건, (14년) 2,085건

* 문화재청 소관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의 74%(총 43건 중 32건)가 사유재산 민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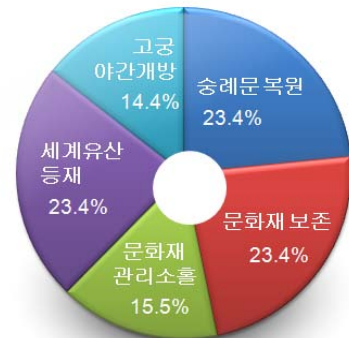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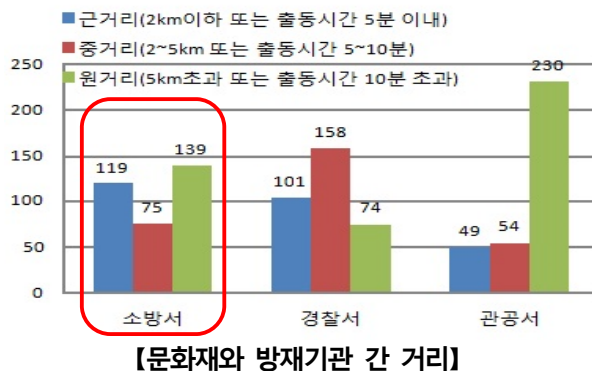
【지정(등록)문화재 현황】



【연도별 현상변경 처리 건 수】

□ 문화재 안전·복원 관심 증대에 따른 국민 참여기반 조성 필요

- 기존 방재인프라(방재기관 접근성 등)만으로는 재난 대응에 한계 및 국민들의 안전 신뢰 확보 부족
 - *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전문가 만족도 : (13년) 77.1점 (14년) 74.9점
 - * 목조문화재 소방서 접근성 : 출동시간 5분 초과 64.3%(전체 333건 중 214건)
- 숭례문 등 핵심문화재 부실관리 논란으로, 문화재 보수 복원의 공정성 투명성 요구 증대
 - * 국민 빅데이터 분석 결과(13.10월 ~ 14.11월 / SNS 등 약 15만 건 대상)
문화재 안전 복원(숭례문 복원, 문화재 보존, 문화재 관리소홀)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62.4%(9만여 건)로 활용사업(고궁 야간개방, 세계유산 등재)보다 높음



□ 국가 간 문화유산 경쟁 심화로 국제무대 위상 강화 요구 증대

- 세계유산 우선 등재 경쟁, 역사유산 등재 등을 둘러싼 동아시아 주변국(중국 일본)과의 갈등 심화
 - * 우선등재 경쟁 유산 : 줄다리기(한 중), 해녀문화(한 일)
 - * 역사 갈등 유산 : 메이지 시대 일본산업유산군(한 일), 고구려 고분군(북 중)
- 남북 문화재교류 활성화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, 환수 협상력 강화, 문화유산 분야 ODA 지원규모 확대 등 국제 영향력 강화 필요성 대두
 - * 정부 전체 ODA 예산 대비 문화유산 ODA 예산규모는 0.09%에 불과
(정부전체) 2조2천여억원, (문화재청) 20억원



비전

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풍요의 미래



중점과제 1 문화유산 보존·전승 체계 고도화

◆ (현 황) 사후 보수정비 중심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의 한계노출

- 문화재 수리품질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현장의 문화재 특성에 맞는 집중관리가 필요
 - * 수리업자의 수리품질 만족도 : 70.2% ('12년, 한국건축역사학회)
 - *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, 전수점검 대상(7,393건) 중 즉시보수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비율이 22.8%(1,683건)을 차지
- 문화재 특수성(대체불가능, 방재인프라의 한계 등)을 반영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정책 실현 기반 마련 필요
- 실무기능을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필요
 - *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편 추진 : 중장기발전 기본방향 용역('14.5월), 대학 자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진행('14.9월~)

◆ (추진방향) 중요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 및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강화

- (상시점검 강화) 중점관리문화재 정기점검 강화 및 정보공개, 문화재 현장 전문인력 집중 배치, 문화재관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재 관리체계 내실화
- (안전관리 강화) 재난안전 빅데이터 활용, 방재설비 확대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고도화
- (연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)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연구,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 연구, 전통소재 제작 기법 및 품질 시공기준 연구,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('16년 시행 목표)

□ 문화재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

- 외부환경 취약 훼손이 높은 중요문화재, 맞춤형 집중관리
 - 위험요소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 일반 공개(연중)
 - * 중점관리 문화재 56개 선정('첨성대', '색굴암' 등, 15.1월)
 - 신속 초동 대처를 위한 안전경비원 24시간 배치(국보 보물 등 133건, 383명)
-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추진(보수 적시성 확보, 5년→3년)
- '문화재 돌봄사업' 운영 내실화('14년 84억 5,657건 → '15년 98억 5,800여건)
 - 보존과학 전문 인력 등 의무 배치(17개 시도 85명), 표준매뉴얼 개발(3월)
- 「문화재 관리자」 자격 제도 도입(법 개정, '15년)
 - 지자체 및 돌봄단체 의무 배치
 - * 도입 3년간 300명 일자리 창출(장기적으로 2천여명 배치 목표)

문화재관리사 인력수요 전망



□ ICT 활용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

- 문화재청 현장 간 문화재 감시영상(CCTV) 정보 통합 관리('13~'16년 104개소)
 - * 시범개통('14년, 오죽헌 등 6개소), 서울 흥인지문 등 22개소('15년)
- 문화재 재난안전 온라인 교육 훈련 및 상황전파 프로그램 개발(7억)
 - * 문화재 재난안전 빅데이터(현장 정보) 수집 분석시스템 개발('14년, 6억)
- 재난유형별 GIS기반 '목조문화재 안전관리지도' 개발('13~'15년)
 - 목조 건축문화재(333건) 대상 재난위험지수 안전등급 평가 분석

□ 방재 인프라 구축 및 현장 방재능력 제고

○ 방재설비 확대 구축 및 방재기준 개선

- 자동 화재탐지 등 방재설비 확대(등록문화재 161건 중 42건)
 - *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등 중요문화재
구축 완료(~ 14년, 475건)
- 문화재 피뢰설비 및 방재 전기설비 설치
기준 마련 연구(2월)
- 목조문화재 방충(13건) 방염(24건) 및 방염제
성능개선 연구('13~'15년)



【수막설비】

○ 방재설비 전문기관 합동 정기점검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

- 전문업체에 의한 유지관리(소방안전관리자 월1회), 전문기관 합동점검(연 4회,
중앙소방본부, 전기안전공사, 가스공사, 지자체 등 참여), 노후 전기시설 개선(36건)
- 소유자 안전경비원 교육 훈련(위탁교육 10회, 지자체 자체교육 1회)

□ 문화재 불법반출 · 도난 예방 활동 강화

○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내실화

- 공항 항만 및 국제특송업체 등 관련기관 협의로 문화재 검색 강화
 - * 관련기관 : 관세청(세관), 우정사업본부(국제우체국), 공항공사, 항만공사
- 문화재 사전예약감정제도 전면 시행(공항 항만 17개소)
 - * 인천 김해공항 시범 실시 ('14.9월~ 15.3월)

○ 문화재 도난 등 불법행위 예방 강화

- 경찰청 등 유관기관 도난정보 공유, 도난방지시설(CCTV) 설치(13.7억)
- 문화재사범 제보 활성화(포상금 및 제보자 지급비율 상향)
 - * 포상금 2천만원→4천 5백만원 / 제보자 50 : 체포자 50→제보자 70 : 체포자 30

□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

- 무형문화재 신규 발굴 및 전승자 확충
 - 신규종목 학술조사 추진으로 종목지정 가치 검토 강화(조선왕릉제향 등 10종목)
 -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('15.1월)으로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확대
 - *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 지정 가능(아리랑, 씨름 등)
-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전수교육 관리 강화
 - 보유자(보유단체) 및 전승자의 기량 평가(2.5억원)
 - 합동공개행사 확대, 공개행사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- 전승지원 소외 그룹(이수자) 대상 전승 활성화 정책 연구(0.5억원)

□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강화

- 동산문화재 소장자의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지원
 - 다량소장처 유물전시관 건립(송광사 등 4건, 25억원) 및 보존관리 지원(5.6억원), 훈증 소독 지원(11개소, 1.5억)
- 지류, 목재류, 의류 등 훼손 취약문화재 보존처리(70건, 26억원)
- 기록유산 기초자료 확보 및 공개로 국민 접근성 강화
 - 규장각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DB화(10억원), 중요기록유산 국역사업(7.5억원)

□ 중요민속문화재 합리적 보존·관리

- 민속마을 및 고택 거주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생활편의시설(주방, 욕실, 화장실, 창고 등) 설치제한 완화
- 고택문화재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운영(171개소, 15억원)

□ 자연문화재 보호 · 관리 특성화

- 자연유산 지정 다양성 확대
 - 고서화 고문서 속 명승자원, 축양동물(흑돼지 등), 노거수 등 지정 추진
-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「천연기념물 보존 종합계획」 수립
- 자연유산 보존관리 고도화를 위한 조사 연구 추진(2.2억원)
 -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통합시스템구축 전략계획 및 동물 관리 방안 등
-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(산림청, 국립축산과학원 등)
 -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목재단지 조성,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확대
 - AI 등 절종위기 대비, 축양동물 유전자원(정자, 난자 및 체세포 등) 동결보존처리
 -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, 노거수 유전자은행 조성(대구 도동 측백나무 등 19건) 및 후계목 육성(보은 속리 정이품송 등 26건 360본)

□ 경복궁 등 중요문화재 보수 · 정비 및 기반 마련

- 고궁 및 조선왕릉 정체성 회복
 - 경복궁(홍복전권역), 덕수궁(고종의 길), 사직단(발굴조사) 등 복원 추진
 - 조선왕릉 정밀기록화 추진('06~'15년 55기, 50기 완료 / '15년 5기)
 - 태릉(조경), 동구릉(수복방 등) 원형복원 및 부적합 시설물 철거 정비
 - 고궁 등 현판 원형에 대한 고증 연구 추진(2억원)
-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추진(1,122건, 2,702억원)
 - 세계유산 보존관리,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(등록) 문화재
- 「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」 건립 추진('12~'16년 246억원, 파주시/'15년 70억원)

*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

고종 당시	1990년 (1차 복원 전)	2010년 (1차 복원 완료)	2030년 (2차 복원)	
500여동	36동	89동 복원 총 125동	254동 복원 총 379동	
고종당시 대비 복원률	7.2%	25%	75.8% *적정복원률 검토	

□ 문화재 보존 기준 마련 및 기록화

- 중요목조문화재 단청 기록화(4건, 3억원),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('06년~, 경북지역 목조 건칠불 10점, 2억원)
- 전적류 영인본 제작('87년~계속, 2011년 환수된 조선왕조의례 10책 1질, 2억원), 동산문화재 보물 대관 발간(서예류 80건, 1.4억원)
- 사적 보존 정비 매뉴얼 마련(요지, 0.5억원), 정밀실측·DB 구축(1건, 2.1억원)
- 국가기록유산포털 원문 DB 구축 및 국역 서비스(중요 전적류 10종 36만자, 7.5억원)

□ 분산된 문화재 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 공개

- 개별 문화재의 생애 관리(시스템 구축, 12월)
 - * (지정 관리이력) 지정, 수리, 조사, 점검, 발굴, 관련 매뉴얼 등
 - * (수리 이력) 참여인력(기술자 기능자, 감리자), 도면 등
- 문화재 관리이력 정보 공개 확대
 - * ('14년) 문화재 기본정보 → ('15년) 기본정보 + 지정관리이력, 수리이력

□ 비지정문화재 자원 발굴 및 지정

- 현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'예비문화재 제도' 도입(법안 국회계류 중)
 - *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 미만으로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 보호
- 특정 주제별(테마별) 사적 발굴 지정(지자체 일괄 공모)
 - 인문학 기반(서원 향교), 호국인물(임란, 병란, 항일) 등 테마 중심
- 불교문화재의 체계적 조사
 - 불교문화재 일제조사(7사찰 5천여점, 8억원), 대형불화 정밀조사(3억원), 폐사지 보존·관리·활용 2차 5개년 계획 추진('15~'19년 2,600개소)
- 문화재 분야별 집중 조사
 - 근 현대 문화유산 일제조사(종교 식생활분야, 3억원), 문중 등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 조사(2억원), 조선시대 일기류 전수조사(경북지역 90여점, 1.1억원)
 - 비지정 천연기념물 일제 조사(동굴), 봉수유적 심층 조사(2.9억), 제주 한란 희귀란 자생지 현황조사

4 문화재 연구 · 교육 역량 강화

□ 문화재 조사 · 연구 내실화

- 문화재 보존 복원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(R&D) 강화(46개 과제 수행)
 -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연구 등 아시아 문화권 비교연구, 신석기시대 토기압흔 비교연구를 통한 식물상 연구,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조사기술 연구 등
- 조선 왕실문화 조사 연구(궁중보자기, 조선왕실 현판, 국조보감 등)
- 수중문화재 및 해양유적 연구 기반 강화
 - 수중문화재 탐사 기법 개발 연구(3억원), 서남해안 수중문화재 발굴조사(태안마도,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등, 5~10월),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('12~'16년, 253.5억원)

□ 전통 재료 · 기법 연구 활성화

- 전통 소재 제작기법 규명 및 품질 시공기준 연구('14~'18년)
 - 전통 안료 제법연구, 안료 및 아교 호분 생산공정 기술 연구 등(5.5억원)
- 건조물 문화재 수리용 목재 공급 활성화 추진
 - 문화재 수리용 목재 공급체계 및 함수율 기준 개선방안 연구(2.3억원)

□ 실무기능과 기술을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

-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
 - 융복합교육 강화 등 교육체제 개편('15년)
 - 실무 중시 특성화 교육 과정 강화
 -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 현장전문가 강의 확대('14년 31개 → '15년 35개)
 - 이론 대비 실기 실습 교육시간 지속 증대('14년 47.2% → '15년 48.8%)
 - 현장실습학점제 다양화 및 대학원 전문연구과정 연수기관 확대('14년 60개 → '15년 70개)
- '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장학금 지급방안 마련' 연구용역(0.3억원)
 - 문화재 전문인력 개념 범위, 지급타당성 검토, 관리방안 등

중점과제 2 문화재 분야 규제 합리화와 참여 활성화

◆ (현 황) 문화재 보존 중심 규제로 재산권침해 등 국민 불편초래

- 문화재 보존 위주의 규제정책으로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이 가중되어, 지원 조장을 통해 문화재-주민 공생 기반 마련 필요
-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, 객관성 공정성 민원 지속 제기
 - *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민원(문화재청 43건) 중 현상변경 민원 다수 제기(27건, 63%)
-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「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 지연(국회 계류 중)
 - * 생활환경의 변화,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문화재 자원 단절 위기
- 동아시아 영토분쟁 심화, 다문화가정 새터민 증가 등에 따른 문화정체성 강화 필요성 증대
 - * 다문화가정 출생아 비율 : 11년 4.7%→13년 4.9%(산생아 20명 중 1명) / 새터민수 : 2만 8천명

◆ (추진방향) 규제 합리화와 주민지원 확대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있는 접근 마련 필요

- (규제 개선)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보존유적 평가 항목 마련,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 등 문화재 규제 합리화 실현
- (무형유산 제도) 「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 조속 추진, 전승자 충원기준 조사지표 설정 및 종목별 조사매뉴얼 적용 등 무형유산 제도 선진화
- (주민 지원) 매장문화재 발굴 지표조사 비용 지원, 고도 주거환경 경관 개선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보존 개발 간 균형 유지
- (역사인식 강화) 광복 70주년 사업을 통한 역사인식 재발견

□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매장문화재 제도

- 사전 매장문화재 정보 제공으로 건설공사 시 예측가능성 제고
 - 전국 정밀 지표조사 계획수립('15년) 및 연차별 지표조사 실시('16년 이후)
 - * 기업 국민의 문화재 조사비용 부담 경감 및 문화재 친화적인 개발 가능
- 발굴조사 기간 단축(대규모 발굴조사 시 2개 기관 이상 공동조사 유도), 도시계획위원회 문화재 전문가 참여(국토부 협조)
- 일정기간(20일) 이상 발굴조사 현장 및 발굴조사보고서 일반 공개
- 보존조치 유적 관리제도 개선
 - 보존조치된 발굴유적의 관리 활용 강화를 위한 관리단체 지정 및 관리 지원방안 등 근거 마련('15년 법령 개정)
 - 공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보존유적 평가항목 개발
 - * 이해관계자의 의견, 관련되는 공익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 추가

□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관리

- 문화재 개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(1,845건, '15~'17년)
 - 주요 문화재 시범 조정(30개소, 3월), '허용기준 재조정 지침' 수립(5월)
 - * 문화재 유형별 각 경관요소의 구체화 상세화된 판단지침을 마련 적용
- 현상변경허가의 투명성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'문화재 유형별 경관검토기준(조망권, 스카이라인 등)' 마련(3월)
- 현상변경 허가 관련 행정절차 명확화 및 경미사항 지자체 위임 확대

□ 다양성과 공정성이 살아 있는 무형문화유산 제도 도입

- 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’ 제정(국회계류 중)
 - 지정분야 다양화, 공예분야 진흥정책,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 수요 반영
- 무형문화재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
 - 전승자 충원 기준 및 조사지표 설정,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「중요무형문화재 조사 매뉴얼」 운영(132종목)

□ 문화재 수리기술 품질 향상

- 문화재수리 책임성 강화 및 불법행위 처분기준 강화
 - 중요문화재 수리현장 공개, 책임감리제도 및 수리실명제 도입
 - 수리기술자 자격정지기간 강화(2→3년), 수리업자 영업정지기간 강화(1→3년)
- 소액위주 문화재 수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입찰제도 개선(일괄 적격심사 제도 예외)
- 불법 자격대여 재발방지 및 자격제도 합리적 개편
 - 자격대여 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, 자격증 정기 일제조사, 자격시험 개편안 마련

□ 지역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

- 문화재 관리체계 정상화방안 연구 용역 추진(1~6월, 1억원)
- 현장 중심의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청 조직 강화
(권역별 조직 설치 및 재정비 방안 마련, '15년)

□ 문화재위원회 운영 내실화

- 문화재위원회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
 - 의사결정시 기업 주민 핵심의견(손실 등) 회의록에 기재 공개 추진
 - 문화재 유형별 세분화 된 ‘현상변경 허가 심의 기준’ 마련(6월)
 - 문화재위원 해촉 사유 명시화(민형사상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)
- 문화재위원회 위원 선정 구성
 - 문화재위원 위촉(위원 80, 전문위원200) 및 문화재위원회 재구성(5월)
 - * 언론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인사 위촉, 유임 겸임을 최소화 등

□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

- 소규모 지표 발굴조사 비용 국가부담 확대
 - 소규모 발굴조사비(95억원), 민간 3만㎡미만 지표조사비 지원(7억원)
- 수해, 도굴 및 유물 발견 등 긴급 수습 및 발굴조사 지원(15억원)
- 미술작품 설치 등 법적 의무의 보존유적 대체근거 마련 추진
 - *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」 개정 추진(문체부 협의)
- 매장문화재 규제 보상 차원의 지역경제 맞춤형 사업 지원
 - 일자리 창출, 문화유산 활용 등 민간 공모(2월)

□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

- 문화재와 조화로운 ‘역사문화환경 조성’ 사업 추진
 - 건축물 관리계획, 디자인 조성방안, 명소화 전략 등 세부계획 수립
- 역사문화환경 내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계 지원
- 문화재 규제지역 주민 공감정책 개발 시행

□ 고도(古都) 주민지원으로 매력적 고도지역 공간 조성

- ‘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’으로 고도 이미지 창출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
 - 고도지구 내 노후 불량주택, 도로변 건물외관 등 고도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(80억원)
-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고도보존의식 뿌리내리기 유도
 - 아카데미, 전통공예교실운영, 계간지 및 고도학술총서발간 등

□ 국민 역사 인식 재조명을 위한 ‘광복 70주년’ 사업

- 정신문화유산 「민족 얼」 찾기 추진
 - ‘민족 얼’ 문화유산 발굴 국민제안 공모 및 홍보(2월~8월, 0.5억원)
 - 문화재에 담긴 정신 재조명 세미나 개최(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, 5월)
- ‘광복의 의미 재발견’을 위한 문화재 소재 프로그램 마련
 - 항일독립운동 관련 등록문화재 특별전시회(8월~9월, 덕수궁 중명전/2억원), 미디어 파사드 상영(8월, 덕수궁 석조전/‘대한제국, 광명의 빛으로 살아오다’)
 - 창경궁 인문학 강좌(8월) 및 항일유적 음악회 개최(8월, 군산 등)
 - 무형문화유산과 연계한 특별공연(8월~10월)
 - 경복궁 야간개방 공연 ‘경희루 성하(盛夏)에 물들어(가칭)’, ‘덕수궁 풍류 100회 특별공연’, ‘굿 보러 가자’(‘광복 서울’ ‘꿈꾸는 연해주’, 10월)

□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운영 개선

- 국보 제1호 숭례문 지정 타당성 논란에 따른 개선방향 도출 등 연구

□ 국민 주도 문화유산 보호 활동 저변 확대

- ‘한 문화재 한 지킴이’ 운영 내실화(8만여명, 50개 기업 / ‘14.12월 기준)
 - 위촉방법 개선(先 교육 및 활동, 後 위촉), 자격요건 강화(활동실적 고려)
 - 기업 참여 문화재지킴이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파트너십 활성화
- 기업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참여기반 조성(한국문화재단)
 - 기업 문화마케팅 네트워크 구축, 포털 ‘지식백과’ 문화유산콘텐츠 제공
-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 증대 및 운영 내실화(‘15년 회원 11,000명 달성 목표)
 - 청소년 참여 환경 조성(문화유산답사, ‘문화유산 홍보대사 되기’ 및 ‘우리문화유산 알리기 대학생 서포터즈’ 운영), 보전대상 문화유산 선정(12선)
-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기자단 홍보활동 강화(테마별 취재 홍보 등)

중점과제 3 | 문화유산 향유와 미래가치 창출

◆ (현 황)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지역 문화유산 자원화 시급

- '창덕궁 달빛기행', '궁궐 야간개방' 등 궁궐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폭증하고 있어, 이를 수용할 대체프로그램 개발 필요

* 창덕궁 달빛기행(연3,900명) 및 경복궁 창경궁 야간개방(연127,000명) 관람
: 인터넷 티켓 판매 개시 10분 만에 매진

-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(대부분 쇼핑, 의료관광에 집중)을 문화재 관람으로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동력 제공 필요

* 외국인관광객(1,217만명, 13년) 중 궁궐 관람객은 17.8%(222만명)

-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, 문화재를 매개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육성 필요

◆ (추진방향) 문화유산 명품 브랜드 육성, 지역 특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

- (명품브랜드 육성) 고품격 궁궐문화 프로그램 개발,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발굴을 통한 문화유산의 세계화

- (향유기회 확대) 궁능 개방 확대, 지역주민 문화재관람료 감면, 소외계층 문화유산교육 등으로 문화복지 실현

- (지역문화유산 활용) 생생문화재 및 향교 서원 사업,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(월정교 황룡사 복원 정비, 월성발굴 등) 등으로 지역문화유산의 가치 확대

□ 세계인이 찾는 궁궐 문화프로그램 확대

- 궁궐의 세계적 문화관광 상품화(66.7억원)
 - 「궁중문화축전」 세계 명품축제로 개발(5월 종묘대제 연계 / 궁궐의 유 무형유산과 첨단기술 접목)
 - 최고 궁궐 인기브랜드(창덕궁 달빛기행, 고궁 야간개방) 품질 제고
- 궁궐의 역사 문화체험 공간 지속 조성
 -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(소주방 복원 연계), '궁궐 속 인문학' 주간 신설 순회강연
 - 의례 재현(수문장 교대의식, 외국공사 접견례 등), 전통공연(덕수궁 풍류,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등), 궁궐 강연(경복궁 목요특강, 정관헌 명사와 함께 등), 문화체험(다례체험, 궁중 장 제작 시연 등)

□ 세계인이 공감하는 '아리랑' 생활문화 확산

-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'아리랑'의 가치 확산
 - 「아리랑 대축제」 개최(국내 외 전승단체 참여, 10월), '아리랑의 날' 제정 추진
- '아리랑' 중요무형문화재 지정(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)
 - *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연구 용역 완료(14년)

□ 문화유산 스토리 자원 발굴로 문화산업 촉진

- 문화재 유형별 이야기자원 발굴 추진(0.8억원 / 천연기념물)
 - * (10~'14년) 이야기자원(620선) 발굴, (16년) 무형 민속 문화재, (17년) 보물 등
-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(1억원)
 - 민간 창작 소재 개발 원천자료로 제공
 - * (15년) 웹툰, (16년) 플래쉬 파일, (17년) 동영상 등
- 문화재 이야기자원 활용 스토리랜드 구축('디지털 문화재이야기 은행' 등)

□ 궁·능 무료관람 및 비공개 지역 개방 확대

-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단계적 개방(영원 화인원)
 - * 연차별 계획 : (16년) 소령원 수길원, (17년) 파주장릉, (18년) 광해군묘
- 경복궁 소주방(2월), 조선왕릉 수복방 수라청(12월) 복원 개방
- '문화가 있는 날'(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) 궁·능 일제 무료개방

□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

- 직접 찾아가 나누는 문화유산 교육
 - 문화소외계층(다문화가정, 새터민 등) 대상 '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', '찾아가는 왕실문화 박물관'(5~10월, 낙후지역 및 장애인 대상 36회), '찾아가는 해양문화 박물관'(4~11월, 도서 산간지역 대상 3회)
- 시민과 함께 하는 조선 왕실문화
 - 소외계층 '왕실태교'(40회), 장애인 다문화가정 맞춤형 체험교육(20회)
 - 궁궐 및 왕릉과 연계한 문화학교 운영(70회)

□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유산 인식 함양

- 수혜자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
 - 학교(초·중·고) 역사교육 콘텐츠 서비스 확대(학교 IP TV방송)
 - * 교육재단 교육방송 콘텐츠 573편,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20편 등
 - 장애인(영상수화), 외국인 다문화 가정(영·중 일어) 서비스 제공
- 민·관 협업을 통한 문화유산교육
 - 자유학기제(교육부 주관) 프로그램과 '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체험' 연계
 - 문화유산교육용 게임콘텐츠(한국콘텐츠진흥원 개발) 보급 홍보
- 지상파 방송을 통한 문화유산 홍보기능 강화
 - '문화유산 코리아' 제작 지원(EBS), '연중 문화유산 캠페인' 영상 제공
- 문화유산 콘텐츠 해외 보급(해외포털, 세종학당재단과 연계, 문화유산채널)

□ 지역문화유산 활성화를 통한 가치 증진

-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및 문화융성 기반 확대
 - ‘구 서대문형무소-독립군을 지켜라’ 등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(105건, 20.7억원)
 - * (08년) 4건 1억원 → (‘13년) 24건 12억원 → (15년) 105건 20.7억원 확대 시행
 - ‘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문화재 만들기’ 사업 추진(71건, 21억원)
 - * 인문정신 함양을 위한 마음공부 및 대중적 인성교육 체험놀이 발굴 운영
- 지역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품질 제고(4억원)
 - 활용사업 관계자 워크숍, 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 홍보
- 지역문화재 안내체계 개선(1억원)
 - 문화재 영어 안내문안 표준안 보급, 디지털 문화재 안내체계 시범 구축

□ 고도(古都)지역 특성화로 지역 경제 활력 촉진

- 예측 가능한 고도(古都) 관리시스템 마련
 - 각 고도별 경관관리기준 적용 법제화(조례 개정)
 -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 추진
 - * 주민지원사업 내용 구체화, 고도별 고도보존육성재단 및 고도육성지원 특별회계 설치,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개선 등
- 지역특색을 고려한 고도(古都) 핵심유적 복원 정비 추진
 - 신라왕경핵심사업(8개)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월성 등 발굴 복원 정비
 -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(준비단 발족 3월)

중점과제 4 문화유산 교류와 환수·활용 내실화

◆ (현 황) 세계유산 등재 국가 경쟁 심화, 문화재 환수 국가 간 갈등

-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 중 일 간 경쟁 과열
-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, 국내외 관광객의 향유 기회 증진 필요
- 한 미 수사공조 강화 등을 통한 전략적 국외문화재 환수 대책 필요
- 남북문화재 교류 부진으로 문화를 통한 통일기반 구축에 어려움

◆ (추진방향) 세계유산 등재 및 불법반출 문화재 적극 환수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·공조 강화 필요

- (세계유산)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4건 등재 추진, 국제협력 강화 및 ODA를 통한 문화국가 위상 제고
- (문화재 환수) 국외소재문화재 실태 및 출처조사, 국제 수사공조 확대 등 환수전략 강화
- (남북교류) 남북 공동 발굴조사 지속 추진, 북한 소재 지정문화재 조사 지원,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북한 국제활동 지원을 통한 남북 화해 협력 토대 마련

□ 유네스코 등재 지속 확대로 문화유산 가치 증대

-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(1.2억원)
 - <'15년 결정 4건> 백제역사유적지구(세계유산 6월), **KBS 특별생방송 '이산가족을 찾습니다'** 기록물 및 유교책판(세계기록유산 6월), 줄다리기(인류무형유산 11월)
 - <'16년 결정 2건> 한국의 서원(1월) 및 제주해녀문화(3월) 등재 신청서 제출

<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제 활동 적극 참여>

- 세계유산위원회(6월), 무형유산위원회(12월),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(11월) 등

□ 세계유산 상시 점검 및 홍보 활성화

- 세계유산(11건) 상시 모니터링 운영, 활용 및 홍보 강화(12.3억원)
 - 체험프로그램 및 활용 콘텐츠 개발, 홍보물 제작 배포(한국의 역사마을 등 6개 세계유산), 해외 홍보(해외 홍보 자료 현황 조사 및 방안 마련)
- 세계유산 등재 20주년 기념식 및 「세계유산포럼」 개최(11월, 경주, 1.4억원)

□ 국제사회 참여로 문화국가 위상 제고

-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(ODA)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
 - 세계유산 보존 복원 지원(라오스 참파삭 홍낭시다, 캄보디아 프레이아피투 유적),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(스리랑카, 네팔, 파키스탄 등), 미얀마 바간 유적 기초조사,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 보존 복원 대상지 선정 협의
 - 중남미 지역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워크숍, 저개발국 문화재 복원을 위한 장비 지원
- 몽골과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보호 협력 강화(서식지 공동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)
-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(ACPCS) (2회, 10명)
- 국제기구 인력과견 등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 강화 추진(유네스코 등)

□ 체계적인 조사 · 관리로 국외문화재 환수 기반 마련

-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과 가치파악 실태조사('15년 6,000점→'17년 10,000점)
* 국외문화재 16만 여 점 중 4만 5천여 점(28%) 조사 완료
- 문화재 반출 경위 및 출처 조사(불법 부당성 입증 등) 강화
- 일본인 문화재 수집가, 매매상 등 사적(私的) 반출경위까지 조사 확대
-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 자료 정보 축적 제공(2만점 DB화)
- 독립정신 자주외교 상징 건조물 실태조사('14.12월~'15.3월) 및 매입 추진

□ 국제 · 민관 협력 강화로 환수 활성화

- 한 일 국교정상화 50년 계기, 일본 소재 우리문화재 적극 환수
- '한 일 문화재 공동협력체' 설치 지속 협의(외교부)
- 한 미 수사공조 강화로 문화재 조속 환수 추진(문정왕후 현종어보)
- 정부 협상 여건 조성 및 전략적 협력 체계 마련
- 환수대상목록 작성, 환수전략 수립, '해외문화재협의회'(외교부) 안건 상정 추진
- '제5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'(10월, 터키), '문화재 반환촉진 정부 간 위원회' 참석, 민간단체 환수활동 지원(4개 단체, 1.6억원)
- 민간단체의 국외 소재 문화재 구입 기증 여건 개선
- '국외소재문화재재단'의 법정기부금 단체 전환(12월, 기재부 협의)

□ 국외 소재 문화재 가치 바로 알리기

- (국외 홍보) 국외 소재 문화재 소장기관의 보존 지원 및 홍보(3~4개소, 2억원), 현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박물관 큐레이터 등 전문가 포럼
- (국내 홍보) 환수문화재 전시회 및 도서 발간(돌아온 문화재 총서3), '국외문화재 바로 알기' 교사연수(2회), '국외문화재 아카데미'(일반국민 대상)
-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전시관 활용 추진('15~'16년, 70억원)

□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 지속 전개

- 개성 고려궁성(만월대) 발굴조사 확대
 - 개성만월대 제7차 남북공동 발굴조사(서부건축군 일부 약 4,000㎡, 6개월 예상)
 -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, 남북공동 학술회의 · 특별전시회(8월)
-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남북 공동 보존
 - 평양 대성동 고구려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(고분 2기, 2개월 예상)
 - 보존 전문가 참여 출토유물 보존 조치



【고려궁성 현황도】

□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조성

- 남북 문화재 교류활용 기본계획 수립(6월)
- 남북 문화재 공동 등재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지원
 - 기 등재 세계유산의 북한 소재 유산 추가 등재(조선왕릉, 고인돌유적 등), 인류무형유산(씨름) 및 세계유산(금강산 설악산) 공동등재 추진
 - 인류무형유산(아리랑, 김장, 씨름) 등재 추진 관련 남북공동 행사
- 남북 문화재 교류 확대 대비 조사 연구 강화
 - 고고 건축 미술 보존 등 학제 간 조사 연구 협의체 구성, 정책 기초 자료 축적

□ 민족유산 통합 DB구축 및 보존 지원

- 북한 문화재 현황조사 및 민족유산 통합 DB 구축
 - 북한 소재 지정 문화재, 고문헌 등 유형별 분야별 현황조사
 - 남북 학계 간 교류협력 지원, 북한 측 자체조사 지원 후 성과 공유 방안 등 방법 모색
- 북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자재 지원(항온항습기 등)

1 개방·공유의 문화유산 3.0

□ 정보공개제도 개선으로 국민 접근성 강화

- '용역관리시스템'을 통한 문화재청 전체 연구용역 성과물 공개
- 국민 수요가 많은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 등 공개서비스 강화
 - '문화재GIS'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(보존유적 포함),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보 실시간 공개
 - 국가문화유산포털(www.heritage.go.kr)을 통한 문화유산 각종 자료 260만점 정보(도면, 사진, 영상, 보고서 등) 종합검색 서비스 제공
- 무형문화재 분야 '원스톱 전승지원 시스템' 구축·운영
 - 전승지원 사업 온라인 처리시스템(신청-접수-처리-정산) 및 전승자-문화재청, 전승자 간 맞춤형 소통 공유센터(토론의 장, 의견 수렴란 등) 운영
 - 일반인 대상 무형문화재 공연·전시 정보 알림서비스, 전승자 작품 구입 경로 안내 및 공예공방 온라인 연결 서비스 실시
- 장애인·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
 -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 수화, 자막, 음성, 외국어 서비스

□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유능한 문화재청 구현

- 문화재 관리행정 체계적·과학적 운영 기반 마련
 - 지정, 보수·복원, 활용 등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 종합규범 마련
 - * 영·프·독·일 등 선진국 사례 참조하여 법령-행정규칙-지침 등 체계화
- 민원다발업무 분석, 원인규명 및 해결책 마련으로 민원만족도 제고
 - 국민신문고, 청 고객지원센터 민원사례 전수조사 후 선제적 대응
- 관계부처 협업지도 개발 및 부처협업 강화
 - 문화재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(문화재청, 산림청, 기상청, 국민안전처 등)

□ 반부패·청렴 시스템 운영을 통한 내부 청렴도 제고

-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(4월)
 - 청렴도 개선 방안 공모, 청렴 워크숍 등
 - *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 수준
- 부패방지 인프라 운영 강화
 - 청탁 알선, 공익신고, 금품신고 등 분야별 신고시스템 활성화
- 고위직 교육 평가 등을 통한 조직 청렴문화 조기 정착
 - 고위직 청렴 교육 및 청렴도 평가 등 청렴 리더십 확립
 - 공직생애 주기별(4 5급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1년 이내) 및 소속기관 순회 청렴교육 강화
- '반부패 청렴의 날' 운영(부서별 청렴 제도의 이해 및 결의, 매월)

□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·신뢰성 제고

- 법인카드 사용내용 및 수의계약 현황 등 행정정보 공개 확대(매월)
- 문화재옴부즈만 활성화(부패취약 분야 집중 모니터링, 연간 2회→4회)
- 자체 감사기능 강화로 부패 사전 차단
 - 부패행위 감사 감찰 활동 강화, 위반자 고발 조치 등 처벌 강화
 - 감사부서장의 주요업무 감독기능 강화(일상감사, 내부위원회 등 적극 참여하여 투명성 제고)
- 정부기관 간 반부패 자율협력체 구성 운영 내실화(기관별 청렴 제도 및 경험 공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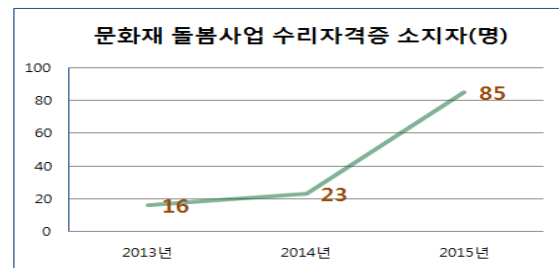
□ 문화재 현장 전문인력 배치로 예방적 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

- 중점 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, 문화재관리사 등 전문인력 현장배치로 문화재 수명과 가치 보전

* 연도별 문화재 관리사 배치 계획 : (16년) 100명 (18년) 300명 (30년) 2,000명

- 문화재 돌봄사업의 전문화·고도화로 예방적 문화재 관리 품질 제고

*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기관 내 수리자격증 소지자 구성 : (14년) 23명 → (15년) 85명



□ 문화유산 브랜드가치 제고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및 국민 문화평등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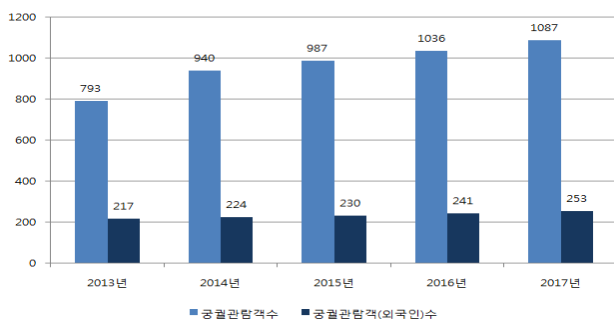
- '궁중문화축전' 등 세계적 문화관광상품 개발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('16년 궁궐 관람객 1천만명 달성 목표)

* 궁궐관람객 수요 : 13년 793만명 → 14년 940만명 → 15년 987만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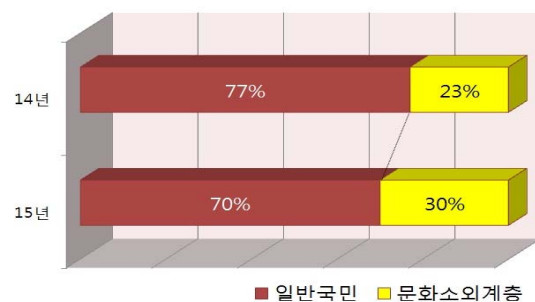
- 문화소외계층 등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으로 문화평등 지속 실현

- 국민 구성비 및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(다문화가정, 새터민 등)의 문화유산교육 강화로 정체성 확보 및 문화평등 지속 실현

*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가정 출생아 구성비 : 11년 4.7% → 13년 4.9% (산생아 20명 중 1명) / 새터민수 : 2만 8천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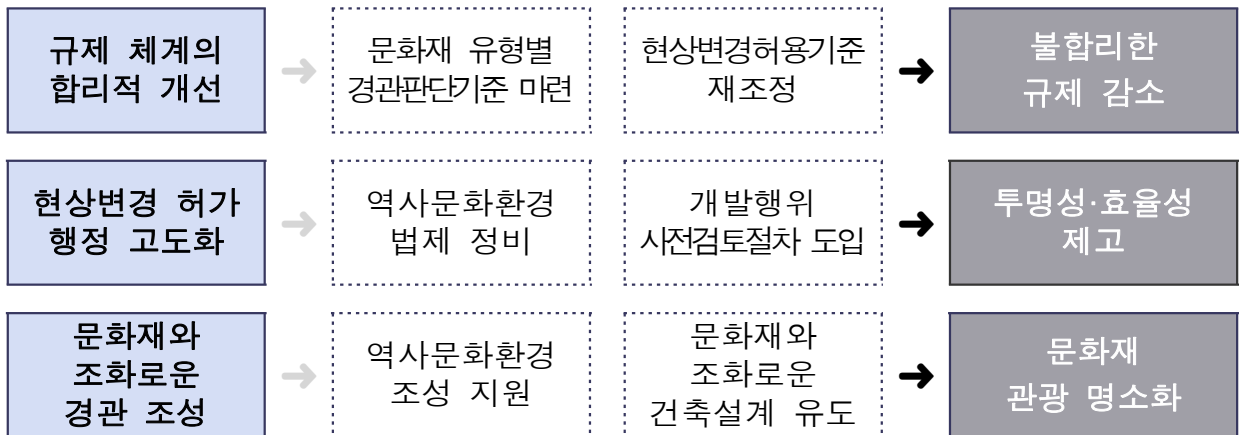
【연도별 궁궐 관람객 수 추이】



【문화유산교육 현황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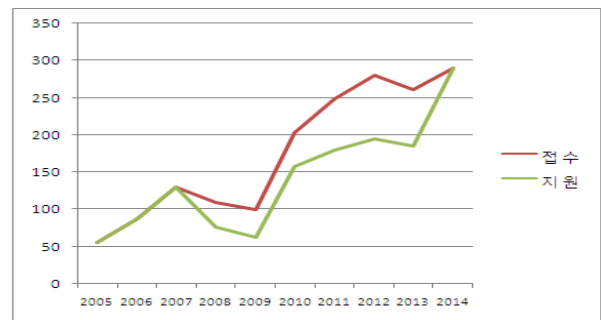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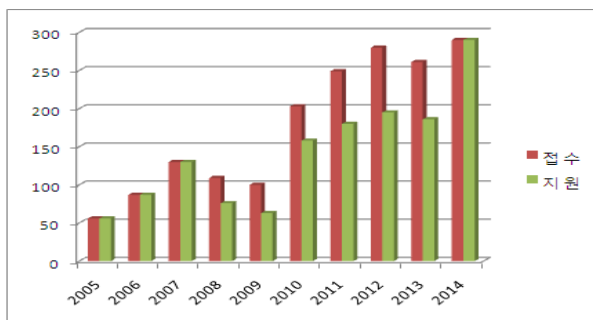
□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공존 상생하는 역사문화환경 조성

-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주민 거부감 완화 및 규제 순응도 제고
- 허가행정의 투명성·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
-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관광명소화 도모



□ 제도합리화로 문화재 수리품질 개선 및 국민부담 경감

- 수리제도의 질적 개선으로 문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
 - * 감리 책임성 강화(책임감리제 도입), 문화재 중요도에 따라 참여기술인력 차별화(경력관리제 도입), 불법 행위 자격정지 처분강화, 저가부실 하도급 계약관행 근절, 현장공개로 투명성 제고
- 서민 영세사업자의 발굴비용 국가 지원 확대 및 민간지표조사 비용 국가 지원(3만㎡ 미만) 신설로 국민 부담 완화(13년 65억 186건→15년 115억 263건)



서민·영세사업자 소규모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현황

1. 임 무 :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

2. 조 직 : 차관청('04.3월), 정원 908명(1관 3국 19과 14소속기관)

3. 문화재관리 재정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12년 예산	'13년 예산	'14년 예산	'15년 예산	비 고
계	5,577	6,148	6,199	6,887	
일반회계	4,329	4,921	5,072	5,700	
지특회계	148	162	98	134	
문화재보호기금	1,100	1,065	1,029	1,053	'10년 도입

4. 문화재현황 : 총 12,267건('14.12.31. 기준)

○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: 4,240건

- 국보 315건, 보물 1,813건, 사적 488건, 명승 109건, 천연기념물 454건, 중요무형문화재 120종목, 중요민속문화재 284건, 등록문화재 657건

○ 시·도지정문화재 5,491건, 문화재자료 2,536건

♣ 유네스코 등재 유산 39건 : 세계(문화·자연)유산 11건, 세계기록유산 11건, 인류무형유산 17건

5. 소관법령 및 위원회

○ 「문화재보호법」('62제정)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'04제정),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('06제정), 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('09제정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('10제정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('10제정),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」('11제정)

○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('62제정)

6. 문화재위원회

○ 9개 분과 77명(겸직 포함 102명/ 전문위원 189명) / 임기 2년('13.5.1~'15.4.30)